

투데이 칼럼

‘쿨하고 대범하게’ 진화하는 민족주의 담론과 정서

2000년대 초중반의 감정적 인 반일/반미여론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불매운동을 두고 감정적인 반일여론이라 매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 삼일절에 ‘방법 2002’ 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씨 등지에서 네티즌들이 불러가 일본 최대 커뮤 사이트인 2차이를 트래픽 과부하로 마비시킨 일이 있었다. 미군 장갑차 반미시위가 한창일 때 맥도널드를 군중이 둘러싸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손님들을 내쫓은 일도 있었다. 씁쓸한 기억들이다.

예전의 진짜 감정적 민족주의의 ‘배운 맛’이란 그런 식이었다. 스스로 힘이 없고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과격해지는 것이다. 그때의 민족주의의 원동력은 확실히 자력 중심과 콤플렉스였다.

그 당시의 불타는 화력에 비하면 지금은 매우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이다. 이제는 굳이 네티즌들이 5CH로 불려가서 악플을 도배하고 트래픽 공격으로 사이트를 마비시키려 하지 않는다. 굳이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고 편의점의 맥주를 다른 것으로 고르고, 여행을 다른 곳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족주의는 현실적으로 더 개인주의화되었고 더 쿨해졌고 더 자신만만해졌다.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지금 이 변화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여기 저기 목에 핏대를 세운다.

민족주의 담론과 정서가 예전보다 진화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좌파의 경우) 진보넷 블로그 시절의 탈 민족주의 담론을 고장난 테이프처럼 재생하거나(우파의 경우) 2000년대 초반의 노무현 신드롬에 담겼던 트라우마에 빙의해서 혼자 불타는 것이다.

어쩌다 일본상품을 소비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을 일일이 저격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제시키려는 분위기가 커뮤니티에 존재한다. 마치 지난날 탄핵 촛불시위 때 전경을 공격하는 사람을 시위대가 나서서 제지했듯이 말이다. 물론 이런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보다 탄핵 촛불시위가 더 발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

람들이 있듯이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별개의 정치적 사건을 막무가내로 뒤섞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연예인이 일본상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눈치 없거나 비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나는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일양국 비교로 볼 때 여기서도 우리가 유독 감정적이고 일본이 이성적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연예인에게 일본여행 사진을 왜 굳이 이 시절에 인증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일본 방송에서처럼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뭔가 한 마디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고, 거기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음침하게 이지메하는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는다.

또한 지금 이 시국에서도(현황 출

판 코너가 있는 일본과 달리) 출판 시장에서 우리가 왜 잘났고 저들이 왜 못났냐는 식의 반일 컨텐츠를 특화해서 판매하기도 소비하기도 않는다. 저런 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충분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감정적인 것은 정치논리에 경계선을 리를 개입시키는 아베 총리와 그 추종자들이다. 한국정부의 외교미스를 굳이 탓해봤자 사법부 판결과 그 후속조치에 적극 개입하는 ‘유도리’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면, 아베의 경우 정치적 분장을 무역보복으로 가져가면 안된다는 냉정 종식 이후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최근 일본은 스스로를 문화적으로 ‘쿨 재팬’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이런 자아 이상의 붕괴를 오히려 일본 측에서 영보게 된다. 고노 외무상이 일본 드라마의 열혈 주인공처럼 주일대사의 말을 꿰고 연극적인 톤으로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 풍경은 평국적인 한국인들이 봐도 촌스럽다. 나도 과거 반일/반공 웅변대회에서나 봤던 연극적이고 과장된 톤을 공식 외교 석상에서 그것도 일본 정치인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냉정을 취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일본의 집권여당과 미디어이다. 치앙마이에서의 단상이다.

기고문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혜택은 국민

최근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진정되지 않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조장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는가부터 살펴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는 수사, 기소, 재판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구조 단계마다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역울한 상황이 줄어든다. 해외의 많은 나라는 수사와 기소단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률과 실무 모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와 기소

를 수행하며 상호견제하는 가운데 협력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독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내에 자체 수사인력이 없거나 검사 작성조서에 증거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형사사법 절차의 전반을 장악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출발한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는 그간 부정부패·권한남용 등 많은 폐단을 낳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화두가 나올 때마다 조직 이기주의적인 주장을 내세우거나 다른 쟁



김 병 섭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점을 끌어들이며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이번에도 검찰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거나 독립적 수사권이 가져온 폐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그동안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국민은 검찰이 과연 그러한 권한

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거나 독립적 수사권이 가져온 폐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로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의 일부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만 가득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에 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나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필수 과제를 인식하고 일제식민시대의 수사구조를 개혁하여 수사, 기소, 검찰이 전담하게 하여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염원해 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 너무 굵어져 실망이다

전북도가 이번에도 도민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 말과는 다르게 행동이 굵은 까닭이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산업과 관련해 선점권을 놓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많은 말을 해놓고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다. 말파로 몸 따로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북도가 해명을 해주어야겠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산업을 주력으로 밀어부치는 것처럼 해놓고는 이렇게 허망한 꼴을 보이다니 입맛이 보통 씹을한 게 아니다.

정말이지 전북도는 분할해야 한다. 도민을 상대로 말의 성찬을 반복하기 보다는 정부 부처가 무언을 기획하고 무슨 방침을 굳히고 있는지 면밀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의 이익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말이지 전북도가 이 정도로 굵은지 몰랐다.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겠다는 정신이 없으니 늘 후발주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사업부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할 때까지 전북도는 뭐하고 있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해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 역량을 한껏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더욱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만 한다.여기 거듭 당부하거니와 전북도는 기민해야 한다.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에 힘차게 매진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날 여러 번 촉구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정서가 다르다. 지역 발전 매진과 관련해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이번에 중소벤처사업부의 사업과 관련해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 말로만 전북 발전을 강조하고 전북 몫 찾기를 주장하면 뭐 하는가.전북도는 그동안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자제할 일이다.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전 방향을 선도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기회를 빨리 빨리 붙잡아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전북도의 브레인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시대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진실로 진실로 매진해주기 바란다.

젊은이 유출 문제 일자리가 답이다

전북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보이는 말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것은 듣던 중 반가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그뿐이니 허망하다. 도내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두운 것 천지다.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인데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고용을 또한 전국 최하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러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지않나.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둔하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도내 언론사들의 보도를 심상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는 기사를 때마다 1면 톱기사로 올려 보도하는 반복현상 말이다. 오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여러 번 언급했거니와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했는데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각 지자체는 실업자 증가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실업자 증가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전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은 전북도가 나서야 마땅하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